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세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나 영 선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세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욱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나 영 선

나영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_____ 이진수 _____

부위원장 _____ 엄석진 _____

위 원 _____ 김동욱 _____

국문초록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를 제외하고 특정 업종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2010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 2015년 청년수당 논란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과 무상교육까지 등장하는 최근의 복지정책을 볼 때,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정책의 범위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으므로 증세는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20%를 기록하며, 여러 선행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부담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은 피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복지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복지비용인 세금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세금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세금에 대한 인식은 크게 조세 불공정 인식과 증세 의향으로 구분하였고, 조세 불공정 인식은 다시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재정패널조사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도 원자료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은(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

호할 확률이 높았고,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은(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복지 확대를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한계효과 개념을 활용하여 다시 말하면,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지고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진다. 반면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지고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높아진다. 복지 확대를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복지태도 결정의 변동을 잘 설명하는 변수는 증세 의향 > 교환의 형평성 인식 >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조세제도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모두 낮은 수준임을 밝히고 조세 불공정 인식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높은 조세 불공정 인식은 납세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없는 개인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높은 조세 불공정 인식으로 인한 조세 회피가 늘어나기 전에 정부의 조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때, 보편주의에 앞서 선택적 보편주의 형태의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복지정책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고안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비용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의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

람일수록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지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선택적 보편주의 형태의 복지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복지비용 확보에 유리하다.

주요어 : 복지태도, 조세 불공정 인식, 보편주의, 선별주의, 증세
학 번 : 2019-22021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제1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7
제2절 복지태도	9
1. 복지태도의 정의	9
2.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2
제3절 조세 공정성	18
1. 조세 공정성	18
2. 조세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	21
제4절 연구가설 설정	24
1. 연구가설	24
2. 연구모형	28
제3장 연구 설계	29
제1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9

1. 연구 자료	29
2. 분석방법	30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2
1. 종속변수	32
2. 독립변수	33
3. 통제변수	34
제4장 분석 결과	37
제1절 기술통계 분석	37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37
2.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48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0
제2절 모형 적합도	43
1. 상관분석	43
2. 모형 적합도	43
제3절 로지스틱 분석 결과	44
1.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	44
2.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	52
3.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	55
제5장 결론	6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1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63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1

표 목 차

<표 1> 16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3
<표 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19년 기준)	5
<표 3> 복지태도의 내용 구성	11
<표 4> 선행연구 속 복지태도의 측정	12
<표 5> 선행연구 속 복지태도 결정요인	17
<표 6> 전체 변수의 측정	35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표 8> 사회경제적 특성	40
<표 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2
<표 10>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계수	43
<표 11>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적합도	44
<표 12>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적합도	44
<표 13>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적합도	44
<표 14>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47
<표 15>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3종제곱합	48
<표 16>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54
<표 17>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3종제곱합	55
<표 18>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56
<표 19>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3종제곱합	57
<표 20>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설 채택 여부	62

그림 목 차

<그림 1> 총 사회복지지출 금액 (단위: 백만원)	2
<그림 2> 2000년 이후 국내 조세부담률	4
<그림 3> 연구모형	28
<그림 4>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50	
<그림 5>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51	
<그림 6>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증세 의향의 한계효과 그림	52
<그림 7>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58	
<그림 8>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59	
<그림 9>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증세 의향의 한계효과 그림	6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며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정하고 특정 업종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중첩되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매출 규모와 임대료 유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지급 기준을 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되어 재난지원금 관련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2010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 2015년 청년수당 논란 등 복지정책의 범위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갔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정책 양상을 보면 무상급식에서 나아가 무상교복과 무상교육으로 확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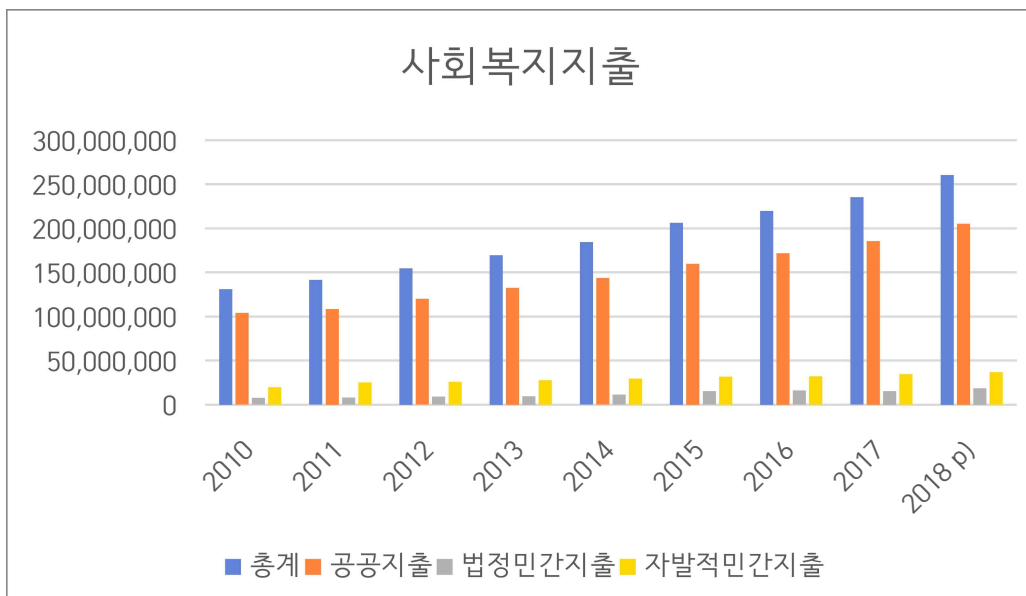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증세에 대한 논쟁 또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고, 최근 정치권 또한 재난지원금의 여파로 인한 증세 논란이 진행 중이다. 결국 세금과 복지정책은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복지태도와 세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보건복지부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9)에 따르면 한국의 총 사회복지지출 금액은 2010년 131조 원에서 2018년 26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총 사회복지지출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지출 금액 또한 2010년 108조 원에서 2018년 205조 원으로 상승하며, 총 사회복지지출 금액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1> 총 사회복지지출 금액 (단위: 백만원)



출처: 통계청;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복지지출은 그 자체로도 매우 큰 규모와 증가세를 보이지만, 전체 예

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더 드러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가 대한민국 재정 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16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가장 많은 재정 지출 금액을 기록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장 많은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16대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도 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표 1> 16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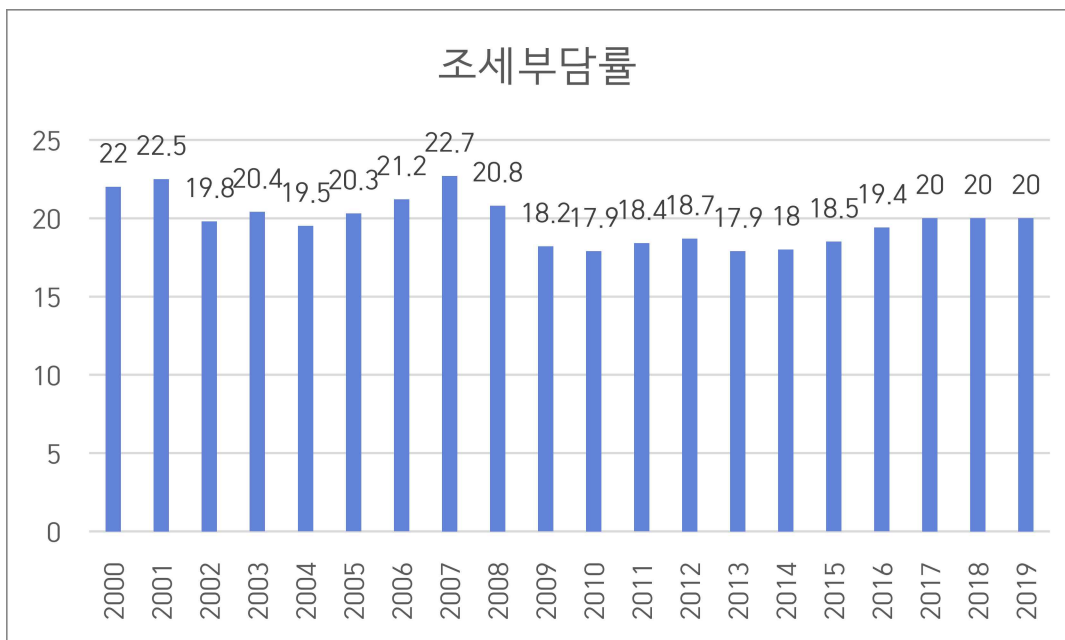
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1. 일반·지방행정	58.0	59.5	63.3	69.0	76.6	79.0	6.4
2. 공공질서 및 안전	16.9	17.5	18.1	19.1	20.1	20.8	4.2
3. 통일·외교	4.5	4.7	4.6	4.7	5.1	5.5	4.1
4. 국방	36.7	37.8	39.0	41.8	45.3	48.7	5.8
5. 교육	52.9	53.2	57.4	64.2	70.6	72.6	6.5
6. 문화 및 관광	6.1	6.6	6.9	6.5	7.2	8.0	5.6
7. 환경	6.8	6.9	6.9	6.9	7.4	9.0	5.8
8. 사회복지	105.3	112.9	119.1	133.8	148.9	167.0	9.7
9. 보건	10.4	10.5	10.4	10.9	12.1	13.5	5.4
10. 농림수산	19.3	19.4	19.6	19.7	20.0	21.5	2.2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16.3	16.0	16.3	18.8	23.7	7.6
12. 교통 및 물류	20.3	19.8	18.6	15.3	15.7	19.2	△1.1
13. 통신	7.6	7.5	7.0	7.0	7.3	7.9	0.8
14. 국토 및 지역개발	4.5	3.9	3.5	3.7	4.1	4.0	△2.3
15. 과학기술	6.6	6.8	7.0	7.1	7.3	8.2	4.4
16. 예비비	3.0	3.2	3.0	3.0	3.0	3.4	2.5
총지출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6.4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총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을 현재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림 2>는 2000년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

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2000년 이후 국내 조세부담률은 대부분 20% 전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써, 여러 선행연구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김성보, 2011; 김연명, 2011; 강병구, 2014; 김공희, 2015; 이충환, 2015; 강욱모, 2018).

<그림 2> 2000년 이후 국내 조세부담률



출처: 통계청;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OECD는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경상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으로써 조세부담률보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이고, 국민부담률은 27.3%로 OECD 회원국 36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와 평균 국민부담률 33.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표 2>는 OECD 회원국 중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보

여준다. 주요 국가 중 미국이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보이고,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3국의 하나인 스웨덴의 경우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 조세부담률 33.7%와 국민부담률 42.9%를 기록했다.

<표 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19년 기준)

구분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국민부담률(%)	27.3	24.5	42.9	45.4	38.8	42.4	33.0	33.8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년판), 통계청

그렇지만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은 피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복지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2007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일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과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 간에 약 30%의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해 약 75%가 동의했지만(동의 43.18%, 매우 동의 31.39%),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약 40%만이 동의했다(동의 37.44%, 매우 동의 2.5%).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8차년도)를 활용한 김사현(2015)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 그를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불일치가 나타난다. 위 연구는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증가·유지·감소)과 복지세금 증가에 대한 의견(찬성·보통·반대)을 기준으로 복지태도를 태도 일치/태도 불일치-복지비용회피형/태도 불일치-복지비용지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9개 복지영역 중에서 8개 복지영역에서 태도 불일치 유형의 수가 태도 일치 유형보다 많았고, 태도 불일치-복지비용회피형 유형의 수가 태도 불일치-복지비용지지형 유형보다 많게 나타났다.

박선경·이내경(2018)은 한국복지패널 제5차(2010년), 제8차(2013년), 제11차(2016년) 조사의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 불평등 악화 인식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한 입장이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경제적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고 이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유형이 약 3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패널이 아닌 「2014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금중예·금현섭(2017)의 연구에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기피하는 한국인의 경향이 잘 드러났다. 기존에 복지 확대를 지지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49.7%였지만, 증세를 수반한 복지 확대를 지지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27.1%로 나타나며 20% 이상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복지 확대에 반대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14.8%에서 증세를 수반할 경우 39.5%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복지지출 확대에는 찬성하면서 복지비용 부담은 회피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기에 복지정책 방향의 결정에 앞서 복지비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강욱모(2018)는 보편적 복지국가 조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비용, 즉 세금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적 쟁점 중 하나이다. 티트머스(Titmuss)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다룬 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이태수, 2016). 원론적으로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이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복지제도도 완전하게 보편주의적일 수 없으므로, 어떤 자격조건이 보편주의적인 정도가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모든 자격조건은 완전한 보편주의를 한 극단으로 하고 완전한 선별주의를 한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는 각자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와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먼저 보편주의자는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는 조세나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같이 재원을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누구나 급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과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는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보다 정치적 지지 획득에 더 효과적이다.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수혜자인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사회구성원 중 일부만이 수혜자인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보다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보다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일수록 대상자 선별과정이 단순하므로 선별적 사회복지제도보다 장기적으로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선별주의자들은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주요한 목표인 빈곤 제거의 측면에서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유한한 재원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평등 달성의 측면에서도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선별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빈민에게 먼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적이며, 선별적으로 교육, 보육,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제도 하에서 조세와 복지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조세·복지 중첩 현상’은 한 가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복지급여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상으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국민의 경제 행위를 왜곡한다(최광·이성규, 2010; 강욱모, 2018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현실에서 완벽한 보편주의는 실현되기 힘들다. 따라서 보편주의 원리 위에 선별주의가 결합되는 방식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더 공평하고 의미 있는 분배의 원리가 될 수도 있다(Titmuss, 1968; 김연명, 2011에서 재인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선별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보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선별주의를 보편주의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강욱모, 2018). 일부 학자는 이러한 보편주의의 바탕 위에 선별주의적 원리가 결합된 자원할당방식을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로 명명하기도 하였다(Hills, 2004; 김연명, 2011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오며 여러 국가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사회민주

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만으로는 정권 창출과 유지가 어려워 노동자 이외의 다른 계급·계층과의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넘어 비임금근로자와 중산층을 지지집단으로 가져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었다(윤홍식, 2011).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을 추가하는 경제적인 이유 또한 존재한다. Korpi and Palme(1998)는 최상층을 배제하는 방식의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을 시행한 호주의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다른 보편주의 복지국가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들은 호주의 사례를 근거로 삼아 복지 수혜 대상이 자산조사를 통해 표적화될수록 재분배 효과는 낮아지고, 보편주의 복지정책이 확대될수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지는 ‘재분배의 역설(the paradox of redistribution)’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적 복지정책과 반대되는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표적화 정책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1종 오류)와 반대로 불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문제(2종 오류)를 발생시킨다(Mkandawire, 2005; 윤홍식, 2011에서 재인용). 동시에 Mkandawire(2005)는 자산조사를 통한 표적화가 빈곤감소와 사회적 불평 등 완화에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행정 인프라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제2절 복지태도

1. 복지태도의 정의

Taylor-Gooby(1985)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은 네 가지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답변에서 패턴을 밝혀냈다. 영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으며, 이 너머에 복지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로 규정된다(Taylor-Gooby, 1985; 류진석, 2004에서 재인용).

복지태도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체계이다(양옥경, 2002). 복지태도와 복지의식은 학자에 따라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한다(이한나·이미라, 2010). 두 개념을 구분하는 연구는 복지의식을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용으로, 복지태도를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중섭, 2009; 김영순·여유진, 2011). 노대명·전지현(2011) 역시 복지의식이란 개인이 분배원칙이나 복지정책 등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것이며, 복지태도는 복지의식 중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기호적 표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복지의식이 복지태도를 포괄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복지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복지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꽤 있었다(김수완 외, 2014; 김사현, 2015; 전희정·서동희, 2015; 유정호·조민호, 2016; 손병돈, 2016; 박선경·이내영, 2018; 조진만, 2019; 양종민, 2020). 복지태도의 유형 구분 없이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정리한 연구 또한 많았다(류진석, 2004; 이준우 외, 2014; 이현우·박시남, 2016; 허수연·김한성, 2016; 이승주·박소영, 2019 등).

선행연구들이 복지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노대명·전지현(2011)은 복지태도를 다섯 가지로 범주화한 류진석(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복지태도의 내용을 범주화했다. 크게 재분배원칙과 개별제도, 그리고 재정부담의 세 가지 범주로 복지태도를 구성

하였고, 복지태도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인 현실인식과 당위성 표현이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현실인식과 당위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복지태도의 내용 구성

범주	구성항목	차원	
		현실인식	당위성
재분배 원칙	책임주체: 국가 vs. 개인		◎
	적용방식: 보편 vs. 선별		◎
	사회정의: 공정 vs. 부당	◎	
개별 제도 (욕구/대상)	제도수용: 지지 vs. 반대	◎	
	지원방향: 확대 vs. 축소		◎
	우선순위: 확대의 우선순위		◎
재정 부담	지출부담: 적정 vs. 과도	◎	
	지출방향: 확대 vs. 축소		◎
	적용원칙: 동율 vs. 소득비례	◎	◎

출처: 노대명·전지현(2011)

위 표에 나타난 복지태도의 내용 구성을 참조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지, 정부지출이 늘어나야 하는지,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토대로 복지태도를 구체화하였다.

<표 4> 선행연구 속 복지태도의 측정

구분	정부의 복지 책임	복지 확대 찬성/반대	성장/분배 지향	증세 찬성/반대	선별주의/보편주의 지향
김상균·정원오(1995)	●			●	
양옥경(2002)	●				
류진석(2004)	●	●		●	●
이중섭(2009)	●	●	●	●	
김사현(2010)					●
이아름(2010)	●			●	

이하나·이미라(2010)	●		●	●	●
김영순·여유진(2011)	●	●		●	
백승주·금현섭(2012)		●			
김수완 외(2014)			●		●
이준우 외(2014)				●	●
김사현(2015)		●		●	
김수정(2015)	●	●		●	
이충환(2015)	●		●	●	●
전희정·서동희(2015)				●	●
손병돈(2016)		●		●	
유정호·조민효(2016)				●	●
이현우·박시남(2016)		●			
허수연·김한성(2016)	●	●	●	●	●
금종예·금현섭(2017)		●			
이선정·김정석(2017)				●	
김상돈·박지영(2018)	●				●
박선경·이내영(2018)	●			●	
김형관·이상록(2019)	●				
이승주·박소영(2019)				●	
조진만(2019)		●		●	
양종민(2010)	●			●	
Katerina Linos · Martin West(2003)	●				
Ann-Sofie Isaksson · Annka Lindskog (2009)	●				
Emma M. Iglesias 외(2013)			●		
Stefan Thewissen · David Rueda(2019)	●				

*이하나, 이미라(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2.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자기이해’(self-interest) 요인과 주관적 인식으로 나뉜다, ‘자기이해’에 따르면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정부방침에 대해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허수연·김한성, 2016). 자기이해 요인은 성별, 연령 등의 인

구학적 요인과 소득, 교육, 계급 등의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종사상 지위, 근로능력정도 등의 노동시장 요인을 포함한다(이아름, 2010). ‘자기이해’와 반대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도 있다(Hasenfeld·Rafferty, 1989; 김사현, 2010에서 재인용). 주관적 인식 요인은 사회에 대한 신뢰, 복지정책 만족도, 정치이념 등을 포함한다(이하나·이미라, 2010).

먼저 ‘자기이해’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본다. 김수정(2015)은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 원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였다.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복지영역별로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가 나타났고, 증세에 대한 태도에서도 성별 격차가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증세에 부정적이고, 주거 및 고용 관련 영역의 정부지출 확대를 요구한다. 이와 달리 남성은 노인, 장애인, 빈곤층 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한 허수연·김한성(2016)의 연구도 개인의 복지태도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복지지위, 교육, 정치성향, 경제활동지위,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서비스 비수급자보다 수급자가,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진보 또는 중도적 성향인 사람이, 고용주 외에 모든 경제활동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활)의 사람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충환(2015) 역시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선호와 증세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가 제시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주·금현섭(2012)는 2008년도와 2010년도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 거주 지역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복지정책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가 증가한 거주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정책 선호가 2008년 대비 증가할 확률이 유지할 확률보다 높고, 감소할 확률이 유지할 확률보다 낮았다. 다시 말해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고,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김수완 외(2014)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분배 지향, 선별/보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복지정책 선호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 고용지위가 선별/보편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선별지향적이고, 고용불안정지위보다 비경활지위가 보편지향적으로 나타났다.

김형관·이상록(2019)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와 유럽인 가치관 조사(European Values Study)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연구 결과, 복지태도의 결정에 실업 수준과 소득불평등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인구가 많을수록, 세후 지니계수가 클수록 정부 책임성의 요구가 커졌다.

Stefan Thewissen과 David Rueda(2019)는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난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사회격차 해소에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동의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추가로 자동화로 인해 직업이 대체될 가능성 또한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관적 인식 요인이 나타난 연구를 알아본다. 많은 연구가

자기이해 요인과 주관적 인식 요인을 같이 분석하였고, 주관적 인식 요인 중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로 나타났다. 이아름(2010)은 한국복지패널 제2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한 태도, 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세금증가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한 태도에는 연령, 가치관 및 정치성향, 노인가구유무가 영향을 미치고, 세금증가에 대한 태도에는 연령, 가치관 및 정치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또한 정치성향의 영향이 있음이 드러나,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에 정치성향이 주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준우 외(2014)의 연구는 복지제도 설계(선별/보편 지향)과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식(누진세 찬성/반대, 증세 찬성/반대)을 중심으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보편적 복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 월소득, 정치이념이 제시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학력, 고용주 여부, 계층의식, 정치이념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하류층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세금 증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2017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한 시민의식종합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상돈·박지영(2018)의 연구는 불평등 인식을 독립변수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지지를 매개변수로, 복지서비스의 정부 책임을 종속변수로 한다. 보편적 복지지지에 불평등 인식, 정치적 이념, 학력, 성별, 계층,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선별적 복지지지에 불평등 인식, 정치적 이념, 직업, 계층,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복지서비스의 정부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보편적 복지지지, 불평등 인식, 정치적 이념, 성별, 선별적 복지지지, 계층,

소득이었다.

이승주·박소영(2019)은 2016년 제13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복지지출 확대/축소, 정부의 복지 책임, 정부 신뢰에 대한 각 입장을 종합하여 측정하였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남성보다 여성이, 저소득층일수록,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지출 확대에 찬성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조진만(2019)의 연구는 복지 확대 찬성과 반대, 세금 인상 찬성과 반대를 조합하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복지 확대 찬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이념, 정치 신뢰도, 연령, 소득수준으로 나타났고, 세금 인상 찬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이념으로 나타났다.

양종민(2020)은 복지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과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이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개입과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erina Linos·Martin West(2003)는 복지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4개국의 조사를 바탕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4개국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온 요인은 소득, 교육수준, 계층이었다. 추가로 계층 이동가능성(social mobility)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Emma M. Iglesias 외(2013)는 World Values Survey와 European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스페인의 복지태도를 분석했는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Ann-Sofie Isaksson과 Annika Lindskog(2009)는 ISSP Social Inequality III survey 자료를 활용해 24개 국가의 복지태도를 분석하였다. 자기이해 요인 외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노력이 아닌 가족에서 기원한다고 여길 수록 재분배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5>).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기이해 요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주관적 인식 요인 중 정치적 이념을 꼽을 수 있다.

<표 5> 선행연구 속 복지태도 결정요인

구분	요인	선행연구
자기이해 (Self-interest)	성별	이아름(2010), 김수정(2015), 전희정·서동희(2015), 이현우·박시남(2016), 이선정·김정석(2017), 김상돈·박지영(2018), 이승주·박소영(2019), Stefan Thewissen·David Rueda(2019)
	연령	김수환 외(2014), 이준우 외(2014), 이충환(2015), 전희정·서동희(2015), 이현우·박시남(2016), 허수연·김한성(2016), 이선정·김정석(2017), 김상돈·박지영(2018), 조진만(2019), Stefan Thewissen·David Rueda(2019)
	교육수준	Katerina Linos·Martin West(2003), 김수환 외(2014), 이준우 외(2014), 이충환(2015), 전희정·서동희(2015), 허수연·김한성(2016), 이선정·김정석(2017), 김상돈·박지영(2018), Stefan Thewissen·David Rueda(2019), 양종민(2020)
	소득수준	Katerina Linos·Martin West(2003),

		백승주·금현섭(2012), 김수완 외(2014), 이준우 외(2014), 이충환(2015), 전희정·서동희(2015), 손병돈(2016), 허수연·김한성(2016), 이선정·김정석(2017), 김상돈·박지영(2018), 김형관·이상록(2019), 이승주·박소영(2019), 조진만(2019)
	계층	Katerina Linos·Martin West(2003), 이준우 외(2014), 김상돈·박지영(2018)
	복지 지위	허수연·김한성(2016), 이선정·김정석(2017)
	경제활동지위	김수완 외(2014), 이충환(2015), 전희정·서동희(2015), 허수연·김한성(2016), 이선정·김정석(2017), 김상돈·박지영(2018), 김형관·이상록(2019), Stefan Thewissen·David Rueda(2019)
주관적 인식	정치적 이념	이아름(2010), 이준우 외(2014), 손병돈(2016), 허수연·김한성(2016), 김상돈·박지영(2018), 이승주·박소영(2019), 조진만(2019), 양종민(2020)
	정부 신뢰	이현우·박시남(2016)
	사회 불공정 인식	Emma M. Iglesias 외(2013), 김상돈·박지영 (2018)
	소득분배 형평성 인식	이한나·이미라(2010), Ann-Sofie Isaksson·Annika Lindskog(2009)
	조세부담 형평성 인식	이한나·이미라(2010), 전희정·서동희(2015), 손병돈(2016), 이선정·김정석(2017)
	고소득층 세금 수준 인식	이현우·박시남(2016)
	세금부담인식	김종예·금현섭(2017)

제3절 조세 공정성

1. 조세 공정성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하고, 세금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근거를 법학, 경제학, 심리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조세의 기본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꼽을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평등주의는 그 자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 기초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평등주의를 위 헌법규정에 따른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규정하였고, 국가는 조세 입법 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선고한 바 있다(임경인, 2020.).¹⁾

다음으로 재정학에서 조세의 공정한 배분에 대하여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은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정도에 따라 조세가 배분되어야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은 각자가 받는 복지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반대로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은 조세가 지급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이 능력원칙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내포된 것으로 평등주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서대석·서영희, 2002).

마지막으로 조세 순응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조세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응보적 공정성(retributive fairness)으로 구분된다(Wenzel, 2003; 강민조, 2017에서 재인용). 여기서 분배적 공정성은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교환관계의 형평성으로 나누어진다. 조세 부담의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동일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경제적 능력이 상이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수직적 공평성

1) 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4헌바261 결정.

(vertical equity)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Musgrave, 1990; 박한순, 2009에서 재인용). 수평적 형평성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같다면 조세 부담도 같아야 공평하고, 수직적 형평성에 따라 경제 수준이 높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교환관계의 형평성은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의 수준에 비례하여 조세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누리는 개인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조세 공정성, 조세 공평성, 조세 형평성 등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는 분배적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조세 공정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조세 공정성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조세 순응과 조세 회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김재휘·강윤희, 2013; 강민조, 2017; 정도호·김창진·배수호, 2019; 배수진·심태섭, 2020).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조세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이다(김태일, 2018).

9차년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정도호·김창진·배수호(2019)의 연구는 강요된 순응과 자발적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세 공정성 인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환의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은 납세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수평적 형평성은 납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의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적이고, 경제 수준이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형평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세 순응적이다,

김재휘·강윤희(2013)는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납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낮을수록, 조세제도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조세제도의 공정성 인식이 낮을수록, 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드러났다.

배수진·심태섭(2020)은 실험참가자 87명의 신고소득률을 토대로 조세 순응 정도를 측정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이 강화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신고소득률 평균을 기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조세

순응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평적
공평성은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oberts and Hite(1994)는 미국의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
사를 통해 응답자들을 강력한 누진세 선호 집단, 온건한 누진세 선호 집
단, 정률세 선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에서 모두 현재 세율에 대
한 불만이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며, 이 조세 불공정
인식은 조세 순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강민조(2017)는 제9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평적 공평성 및
정부와의 교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조세 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납세자들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 대비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경제적 능력이 유사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세금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더욱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을
보여, 조세 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의 교
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득신고율은 낮아져 조세 회피적이
다.

주로 조세 공정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서대석·
서영희(2002)는 조세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선정된 정부에 대한 신뢰, 수평적
공평성, 정부 혜택의 공평성, 조세 회피의 당위성, 수직적 공평성, 탈세자
적발 및 감시 능력, 세법의 복잡성 중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수평적 공
평성, 정부 혜택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 공정성 인식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 혹은 절
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할수록 조세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2. 조세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

앞서 조세 공정성 인식이 조세에 순응 또는 회피하는 납세 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증세에 대
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납세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이선정·

김정석, 2017). 이 납세자들의 합의는 조세 순응적 태도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 공정성 인식과 납세태도의 관계를 확장하여 조세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앞 절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입장을 복지태도로 구성한 많은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로 구성한 연구 외에 독립변수로 한 선행연구를 따로 살펴보자. <표 5>의 조세 부담 형평성 인식, 고소득층 세금 수준 인식, 세금부담인식이 해당한다.

조세 부담 형평성 인식은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조세 공정성 개념 중 수평적 공평성과 유사하다. 고소득층 세금 수준 인식은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는 조세 공정성 개념 중에서 수직적 공평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부담인식은 스스로 판단한 세금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뜻한다.

한국복지패널 제2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한나·이미라(2010)의 연구에서는 형평성 지각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성장/분배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 국가책임 정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 선별/보편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소득분배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성장보다 분배를 지향하고,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임에 동의한다.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소득분배 형평성 지각과 세금 부담 형평성 지각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지향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전희정·서동희(2015)는 한국복지패널 제8차(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복지선호와 증세태도를 두 가지 축으로 하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고,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복지선호에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증세태도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가,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가 증세를 찬성한다. 위 연구는 또한 조세 불공정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증세찬성·보편복지선호] 그룹보다 [증세찬성·선별복지선호] 그룹에 속하고, 조세 불공정 인식이 낮을수록 [증세찬성·보편복지선호] 그룹보다 [증세반대·선별복지선호]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 원자료를 활용한 손병돈(2016)의 연구는 복지지출 확대/축소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복지 확대·증세 찬성] 집단과 [복지 확대·증세 반대] 집단 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의 복지태도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소득계층, 정치이념, 조세 부담의 형평성 인식 등이 제시되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정치이념이 중도인 사람보다 보수인 사람이, 조세 부담이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복지 확대·증세 반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는 또한 [복지 확대·증세 반대] 집단과 [복지반대·증세 반대] 집단 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도 제시하였다.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이 [복지반대·증세 반대] 집단보다 [복지 확대·증세 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예·김현섭(2017)은 기존의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주목해, 세금 부담 인식이 증세가 수반된 복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복지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증세 수반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현우·박시남(2016)도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정부 신뢰 등이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 연구는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8차 한국복지패널조사(2013)의 자료를 통해 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임금수준과 조세 불공정 인식수준의 효과를 분석한 이선정·김정석(2017)의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종속변수인 복지에 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 입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복지 혜택 수급 경험, 정치적 이념과 조세 불공정 인식이 제시되었다. 조세 불공정 인식과 복지증세태도는 양의 관계를 보여, 임금근로자가 조세 불공정을 느낄수록 복지증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연구가설 설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복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위주로 고려하고 있고, 증세에 대한 찬반 입장 자체를 복지태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조세 공정성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는 ‘다른 사람들이 조세를 공정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0(매우 그렇다)의 10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세 부담 공정성에 대한 태도는 평균 3.51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5%가 1점에서 3점을 선택하며 조세를 공정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제8차 한국복지패널조사(2013년)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문항을 1(전혀 아니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 7단계로 측정하였는데, 응답의 평균값은 5.9로 응답자 다수가 조세제도를 불공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서 조세 불공정 인식이 납세자들의 조세 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조세 불공정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독립변수인 조세 불공정 인식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와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선 항의 연구에서 조세 불공정 인식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고, 복지태도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걸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지, 복지 분야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되어 측정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을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 개별적으로 복지태도로 측정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 공정성 인식과 보편적/선별적 복지 선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세금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위 연구가설에서 조세 공정성 인식은 분배적 공정성 개념을 사용한다. 분배적 공정성은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정성, 교환의 형평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수평적 공평성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세 공정성 인식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통해 연구가설을 구체화하였다. 수평적 공평성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와 비슷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느낄수록 불공정 인식이 높고, 공정성 인식이 낮다. 먼저 독립변수인 사회적 불평등 인식에 조세 불공정 인식은 포함하지 않지만, 김상돈·박지영(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동의하고, 선별적 복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희정·서동희(2015)의 연구에서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증세반대·선별복지선호] 그룹보다 [증세찬성·보편복지선호] 그룹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를 분석한 노대명·전지현(2011)은 연령대와 근로소득에 따른 조세 공정성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조세 공정성 태도는 중간 연령층과 중산층에서 가장 낮은 U자형 형태를 보이지만, 대칭적 형태를 보이는 근로소득과 달리 연령대별 조세 공정성 태도는 중심축이 청년층에 위치하여 노년층보다 청년층이 조세를 불공정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연결하면,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교환의 형평성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고, 납부하는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불공정 인식이 높고, 공정성 인식이 낮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 것이다. 복지 경험이 복지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로는 허수연·김한성(2016)과 이선정·김정석(2017)의 연구가 있다. 이선정·김정석(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복지 증세에 대해 더 우호적임을 보였다. 허

수연·김한성(2016)의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수급자일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한다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보험급여수급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환의 형평성과 납세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정도효·김창진·배수호(2019)의 연구와 강민조(2019)의 연구에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소득을 축소해 신고함으로써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 혜택의 독점을 희망한다고 해석한다면,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를 선호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가설을 수평적 공평성과 교환의 형평성으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연구가설 2-1.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로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로 측정된 증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독립변수로 하여 보편주의/선별주의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단순히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한다. 이를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서술했듯이, 복지 확대는 찬성하고 증세는 반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복지태도가 일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고

려할 때, 기존에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막상 스스로가 증세의 대상이 되면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추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로 증세를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의 복지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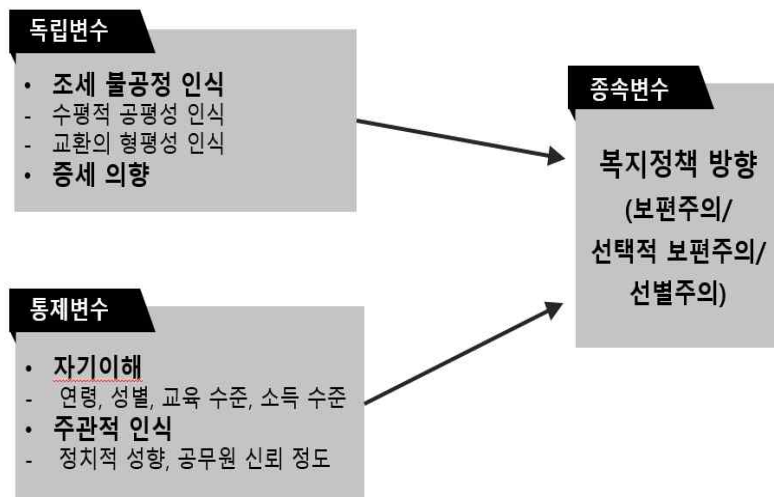
연구가설 3-1.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2. 연구모형

이 가설들을 연구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는 조세 불공정 인식이 납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적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조세 불공정 인식과 복지태도는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로 많이 사용된 세금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호하는 복지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3> 연구모형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다. 재정패널 조사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 분석, 그리고 조세재정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한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조세 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합리성 판단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패널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의 조세 내역, 소득 공제 뿐만 아니라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 혜택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어서 소득수준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관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소득층에서 300가구, 저소득층에서 3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과대표집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인식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중에서도 가구원 조사표의 G. 가구원 의식조사 - [b] 조세·복지제도의 문항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에서 G. 가구원 의식조사가 추가된 9차년도(2016년)부터 최근의 12차년도(2019년)까지 4개년도 데이터를 원자료로 활용한다.

많은 선행연구가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과 달리 재정패널조사를 연구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 세금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문항보다 재정패널조사의 문항이 세금에 대한 인식을 더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3년마다 이뤄지므로 복지태도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원 의식조사가 추가된 후 매년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복지태도의 변화를 더 촘촘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고, 분석 방법으로 설문 응답 결과의 기술통계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 결과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고,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나누어 확인하고, 주요 변수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응답 특성을 따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t model)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으로써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와 그 영향의 크기를 확인하거나, 종속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종속변수의 범

주가 2개일 때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3개 이상일 때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복지정책 선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주요 개념에는 사건 발생 확률과 오즈, 로짓이 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π ,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pi$ 라고 하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상대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오즈(odds)의 정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상대적 비율이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오즈는 π 의 값에 따라 매우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즈에 로그를 취한 값을 로그-오즈 혹은 로짓(logit)이라고 부른다.

<수식 1> 오즈, 로짓의 정의

$$\text{오즈(odds)} = \frac{\pi}{1-\pi}, \text{ 로짓(Logit)} = \log\left(\frac{\pi_1}{1-\pi_1}\right)$$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2개의 범주를 갖고 오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오즈를 기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대비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 종속변수가 J범주를 가질 때, 종속변수의 범주를 나타내는 하첨자를 $j(j=1, \dots, J)$ 라고 하고, 독립변수의 벡터를 X라고 하고, j번째 종속변수의 로짓에 대응하는 회귀계수 벡터를 β_j 라고 한다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left(\frac{\pi_j}{\pi_J}\right) = \alpha_j + X' \beta_j, \frac{\pi_j}{\pi_J} = \exp(\alpha_j + X' \beta_j)$$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식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j 번째 범주가 발생할 확률인 π_j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식 3> 종속변수 한 단위가 발생할 확률

$$\pi_j = \frac{\exp(\alpha_j + X'\beta_j)}{1 + \sum_{k=1}^{J-1} \exp(\alpha_k + X'\beta_k)}; j = 1, \dots, J-1$$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STATA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SAS를 사용하여 제3종 제곱합을 구하고, 한계효과를 계산하려고 한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앞서 선행연구들이 복지태도를 정부의 복지 책임, 복지 확대 찬성/반대, 성장/분배 지향, 증세 찬성/반대, 보편주의/선별주의 지향 등의 여러 문항을 통해 측정한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 문항들 가운데 보편주의/선별주의 지향에 집중하여 복지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연구의 종속변수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보편주의/선별주의 선호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하는 5번까지 5단계의 응답이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재정패널조사는 가구원용 설문지 G. 가구원 의식조사 - [b] 조세·복지제도 - b10번 문항(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을 통해 보편주의/선별주의 선호를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①번(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②번(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③번(선별적으로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제공)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각각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용어인 보편주의, 선택적 보편주의, 선별주의로 대체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조세 불공정 인식과 증세 의향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조세 불공정 인식은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한다. 먼저 수평적 공평성 인식은 재정패널조사의 G. 가구원 의식조사 - [b] 조세·복지제도 - b3. 문항(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번(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부터 5번(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까지 5단계로 나누어진다.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수록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즉, 응답값이 작을수록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다. 그렇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응답값이 클수록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도록 바꾸어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재정패널조사의 G. 가구원 의식조사 - [b] 조세·복지제도 - b2. 문항(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1번(매우 높은 수준이다)부터 5번(매우 낮은 수준이다)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응답값이 클수록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 그대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증세 의향은 G. 가구원 의식조사 - [b] 조세·복지제도의 b9, 문항(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귀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1번(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2번(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3번(현재 세금의 5~10% 미만 추가 부담 의향), 4번(현재 세금의 10~1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5번(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존 연구에서도 증세에 대한 태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주로 종속변수로 본 선행연구와 달리 독립변수로 설정한 점과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반 입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측정한 점에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3. 통제변수

연구의 통제변수는 복지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소득계층 등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진보적 또는 중도적인 사람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말하면 노년층, 저학력자, 정치적 보수파, 저소득층이 선별주의를 선호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선별주의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자기이해’적인 측면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가운데 일부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가구 조사표를 가구원 정보로 변환하여 추가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일반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연령

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의 7단계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초대졸 이하, 대졸 이하, 대졸 초과 5단계로 나누었고, 소득수준은 연간소득에 로그 값을 취하여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으로 구분하였다. 정부 신뢰 변수는 공무원 신뢰 수준으로 대체하였는데, 공무원을 매우 신뢰할 수 있음,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보통,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의 5단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표 6> 전체 변수의 측정

변수	구분	측정
종속 변수	복지정책 방향	1=보편주의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2=선택적 보편주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3=선별주의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제공)
독립 변수	수평적 공평성 인식	1=매우 높음
		2=약간 높음
		3=적절한 수준
		4=약간 낮음
		5=매우 낮음
	교환의 형평성 인식	1=매우 높음
		2=약간 높음
		3=적절한 수준
		4=약간 낮음
		5=매우 낮음
	증세 의향	1=없음
		2=현재 세금의 5% 미만
		3=현재 세금의 5~10% 미만
		4=현재 세금의 10~15% 미만
		5=현재 세금의 15% 이상

통제 변수	연령	1=20대 이하	5=60대
		2=30대	6=70대
		3=40대	7=80대 이상
		4=50대	
	성별	0=남성, 1=여성	
	교육수준	1=중졸 이하	
		2=고졸 이하	
		3=초대졸 이하	
		4=대졸 이하	
		5=대졸 초과	
	소득수준	log(연간소득)	
	정치적 성향	1=매우 진보적	
		2=다소 진보적	
		3=중도	
		4=다소 보수적	
		5=매우 보수적	
	공무원 신뢰 정도	1=매우 신뢰할 수 있음	
		2=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3=보통	
		4=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5=전혀 신뢰할 수 없음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4개년도의 재정패널조사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총 31,708명이다. 2016년에 7,809명, 2017년에 7,865명, 2018년에 7,965명, 2019년에 8,069명이 각각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4개년도에 모두 응답한 사람은 6,509명이다. 매년 응답자 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기존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원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20대 이하가 5.91%, 30대가 13.29%, 40대가 20.99%, 50대가 22.90%, 60대가 15.84%, 70대가 12.92%, 80대 이상이 8.15%를 차지하고 있다. 50대가 조사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40대는 50대보다 적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패널조사의 특성상 가구주가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응답자 중 20대 이하의 비중이 작고, 응답자 가운데 8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더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3.74%, 여성 46.26%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이 역시 가구주가 응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해 온 터라 가구주가 남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응답 수가 매년 100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가구원 조사표는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여성 응답자 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비율)
연령	20대 이하	437	454	473	511	1,875 (5.91%)
	30대	1,135	1,076	1,013	911	4,215 (13.29%)
	40대	1,745	1,687	1,647	1,576	6,655 (20.99%)
	50대	1,757	1,807	1,833	1,863	7,260 (22.90%)
	60대	1,163	1,221	1,278	1,360	5,022 (15.84%)
	70대	992	1,012	1,051	1,043	4,098 (12.92%)
	80대 이상	580	608	670	725	2,583 (8.15%)
	합계	7,809	7,865	7,965	8,069	31,708
성별	남성	4,305	4,246	4,234	4,254	17,039 (53.74%)
	여성	3,504	3,619	3,731	3,815	14,669 (46.26%)
	합계	7,809	7,865	7,965	8,069	31,708

2.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재정패널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공무원 신뢰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초대졸 이하, 대졸 이하, 대졸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였다. 고졸 이하가 32.68%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하(28.83%), 중졸 이하(24.28%), 초대졸 이하(10.26%), 대졸 초과(3.95%)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이 아닌 대학을 졸업한 초대졸 이하가 매년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구간을 따로 분리하였다. 초대졸 이하도 대졸 이하로 간주할 경우 대졸 이하의 비율은 39.09%로 고졸 이하보다 크다. 대졸 초과를 제외한 모든 학력 구간은 상향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졸 이하 응답자는 매년 감소했고,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하, 대졸 이하 응답자는 매년 증가했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연간소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016년도 응답자의 평균 연간소득은 2,782만 원이고, 표준편차는 3,005.3이다. 2017년 연간소득 평균은 2,867.2만 원이고, 표준편차는 3,249.8이다. 2018년에 계산된 연간소득 평

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915.5만 원과 3,441.7이다. 2019년에는 평균 연간 소득이 3,150.9만 원이고, 표준편차는 4,541.0이다. 평균 연간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데 2019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렇지만 표준편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소득의 편차가 커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연간소득에 로그값을 취하여 활용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으로 구분되었다. 정치적 성향을 미응답한 경우가 존재해서 전체 31,708명이 아닌 응답한 29,814명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전체 4개년도 응답을 종합했을 때 정치성향이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는 2.08%, 다소 진보적인 응답자는 26.12%, 중도적인 응답자는 39.40%, 다소 보수적인 응답자는 26.07%,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는 6.32%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가 역시나 가장 많았고, 다소 진보적인 응답자와 다소 보수적인 응답자는 26% 정도로 비슷했다. 그러나 정치성향이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가 2.08%인 것에 반해,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는 6.32%로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와 약 세 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치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신뢰하는 정도는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를 대체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매우 신뢰할 수 있음-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보통-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전혀 신뢰할 수 없음의 5단계로 측정되었다. 공무원 신뢰 정도 역시 정치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미응답이 존재하여 29,81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08%로 가장 많았다. 그 아래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27.64%),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20.67%), 전혀 신뢰할 수 없음(5.79%), 매우 신뢰할 수 있음(2.82%) 순서로 나타났다.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신뢰할 수 있음'과 '신뢰할 수 없음'으로 구분했을 때 신뢰할 수 있음이 30.46%, 신뢰할 수 없음이 25.46%로 공무원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공무원

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의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은 감소 추세이고,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응답자의 일부에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비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2	1,926	1,917	1,895	7,700 (24.28%)
	고졸 이하	2,555	2,577	2,594	2,637	10,363 (32.68%)
	초대졸 이하	781	798	832	842	3,253 (10.26%)
	대졸 이하	2,204	2,248	2,313	2,375	9,140 (28.83%)
	대졸 초과	307	316	309	320	1,252 (3.95%)
	합계	7,809	7,865	7,965	8,069	31,708
연간 소득	평균	2,782.0	2,867.2	2,915.5	3,150.9	(단위: 만 원)
	표준편차	3,005.3	3,249.8	3,441.7	4,541.0	
정치적 성향	매우 진보적	102	202	187	130	621 (2.08%)
	다소 진보적	1,581	2,086	2,177	1,942	7,786 (26.12%)
	중도적	3,016	2,697	2,886	3,149	11,748 (39.40%)
	다소 보수적	2,004	1,923	1,924	1,923	7,774 (26.07%)
	매우 보수적	403	486	446	550	1,885 (6.32%)
	합계	7,106	7,394	7,620	7,694	29,814
공무원 신뢰 정도	매우 신뢰할 수 있음	240	256	214	130	840 (2.82%)
	대체로 신뢰할 수 있음	2,138	2,003	2,289	1,810	8,240 (27.64%)
	보통	3,116	3,223	3,176	3,330	12,845 (43.08%)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	1,328	1,557	1,519	1,760	6,164 (20.67%)
	전혀 신뢰할 수 없음	284	355	422	664	1,725 (5.79%)
	합계	7,106	7,394	7,620	7,694	29,814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9>와 같다. 먼저 종속

변수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 방향은 보편주의가 22.18%, 선택적 보편주의가 54.51%, 선별주의가 23.3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는 비슷하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응답을 보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바람직하다고 선택한 응답자 수는 줄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바람직하다고 선택한 응답자 수가 늘어 사람들의 인식이 중도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들과 비교한 세금 부담 인식을 통해 측정된 조세 불공정 인식 중 수평적 공평성 인식을 살펴보자. 수평적 공평성 인식은 매우 낮음(3.68%), 약간 낮음(33.40%), 적절함(57.91%), 약간 높음(4.22%), 매우 높음(0.80%)의 분포를 보인다.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은 응답자의 비율이 37.08%로써 세금 부담을 낮게 느끼는 비율인 5.02%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에 대한 응답은 3.35의 평균값을 보이며 세금 부담을 불공정하게 인식하는 쪽에 가까워, 수평적 공평성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물론 세금 부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가장 많고 평균값이 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느끼는 사람이 공평하게 느끼는 사람보다 많은 상태이므로 세금 부담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할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매우 높음(0.62%), 약간 높음(10.82%), 적절함(46.48%), 약간 낮음(32.78%), 매우 낮음(9.30%)의 분포를 보인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 또한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마찬가지로 세금 대비 정부의 혜택 수준이 적절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세금 대비 정부의 혜택 수준을 높게 인식한 비율이 11.44%, 낮게 인식한 비율이 42.08%로 나타나, 교환의 형평성을 불공정하게 느끼는 응답자가 네 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평균값은 3.39로 적절함에 가깝지만 3 이상의 값을 보이

므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세금 부담 인식은 의향 없음(64.48%), 현재 세금의 5% 미만(30.85%), 현재 세금의 5~10% 미만(4.12%), 현재 세금의 10~15% 미만(0.38%), 현재 세금의 15% 이상(0.38%)의 순서로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2 수준을 차지했다. 여기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현재 세금의 5% 미만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시도할 경우 큰 반대에 부딪히거나, 낮은 수준의 증세만이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표 9>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비율)
복지정책 선호 방향	보편주의	1,543	1,541	1,811	1,718	6,613 (22.18%)
	선택적 보편주의	4,025	3,897	4,020	4,310	16,252 (54.51%)
	선별주의	1,538	1,956	1,789	1,666	6,949 (23.31%)
	합계	7,106	7,394	7,620	7,694	29,814
수평적 공평성 인식	매우 높음	45	82	50	60	237 (0.80%)
	약간 높음	281	380	293	304	1,258 (4.22%)
	적절함	3,904	4,462	4,456	4,441	17,263 (57.91%)
	약간 낮음	2,589	2,264	2,525	2,579	9,957 (33.40%)
	매우 낮음	287	205	294	310	1,096 (3.68%)
합계	7,106	7,393	7,618	7,694	29,811	
교환의 형평성 인식	매우 높음	32	36	97	20	185 (0.62%)
	약간 높음	777	829	960	660	3,226 (10.82%)
	적절함	3,213	3,501	3,609	3,533	13,856 (46.48%)
	약간 낮음	2,336	2,420	2,343	2,675	9,774 (32.78%)
	매우 낮음	748	607	611	806	2,772 (9.30%)
합계	7,106	7,393	7,620	7,694	29,813	
추가 세금부담 의향	의향 없음	4,612	4,491	4,977	5,144	19,224 (64.48%)
	5% 미만	2,115	2,451	2,344	2,288	9,198 (30.85%)
	5~10% 미만	338	389	264	237	1,228 (4.12%)
	10~15% 미만	22	45	27	19	113 (0.38%)
	15% 이상	19	18	8	6	51 (0.17%)
	합계	7,106	7,394	7,620	7,694	29,814

제2절 모형 적합도

1. 상관분석

<표 10>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많은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0.7보다 낮으므로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7 이상일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계수

수평적 공평성 인식	교환의 형평성 인식	증세 의향	연령	성별	학력	연간 소득	정치 성향	공무원 신뢰 정도
1	-0.2396 ***	0.0140 **	0.1667 ***	0.0954 ***	-0.2166 ***	-0.2058 ***	0.0710 ***	-0.0004
	1	0.0507 ***	-0.1390 ***	-0.0566 ***	0.1790 ***	0.1439 ***	-0.0025	0.0529 ***
		1	-0.1750 ***	-0.0841 ***	0.2159 ***	0.1489 ***	-0.1420 ***	-0.0286 ***
			1	0.0479 ***	-0.5370 ***	-0.3236 ***	0.3942 ***	-0.0099 *
				1	-0.2125 ***	-0.3416 ***	0.0161 ***	-0.0131 **
					1	0.4072 ***	-0.2604 ***	-0.0543 ***
						1	-0.1501 ***	-0.0242 ***
							1	0.0202 ***
								1

(*** p<0.01, ** p<0.05, * p<0.1)

2. 모형 적합도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였다. 우도비 검정은 모형에 독립변수를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절편만 사용했을 때의 우도비와 모형에 독립변수를 포함했을 때의 우도비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각각의 모형에 대해 우도비 검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표 12>, <표 13>). 모든 모형에서 P-value가 유의수준 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회귀계수는 0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각 모형은 모두 적합하다. 그러나 우도비 카이제곱(LR chi2)이 낮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므로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적합도

모형적합도 (N: 29,737)	Log likelihood	-29267.613	Prob>chi2	0.0000
	LR chi2(20)	1178.71	Pseudo R2	0.0197

<표 12>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적합도

모형적합도 (N: 29,737)	Log likelihood	-29078.708	Prob>chi2	0.0000
	LR chi2(20)	1289.168	Pseudo R2	

<표 13>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적합도

모형적합도 (N: 22,153)	Log likelihood	-9449.1054	Prob>chi2	0.0000
	LR chi2(20)	227.08	Pseudo R2	0.0119

그리고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일치추정량 판단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값은 96.358로 나타났고, 이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0001보다 작게 나와 고정효과 모형이 더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제3절 로지스틱 분석 결과

1.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

로짓 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 1단위가 증가할 때 변화하는 로짓(log odds)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Exp(자연상수)를 취해 로그를 제거한다. 다음 <표 14>에 나타난 Exp(β)는 로그를 제거한 값으로써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odds 변화율'을 의미한다. 선별주의를 선택한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므로 Exp(β)를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과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변수는 독립변수 가운데 수평적 공평성 인식, 교환의 형평성 인식, 증세 의향이고, 통제변수 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공무원 신뢰 정도이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회귀계수는 0.160,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오즈비는 1.1738이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부담이 높다고 생각할 경우(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로짓은 0.160만큼 변하고, 오즈는 1.1738배 변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즈는 선별주의를 선택할 확률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의 값이므로,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회귀계수는 -0.376이고, 오즈비는 0.6867이다. 역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본인이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경우(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로짓은 -0.376만큼 변하고, 오즈는 0.6867배 변한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 선별주의를 보편주의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증세 의향의 회귀계수는 -0.0150이고, 오즈비는 0.8604이다. 다시 말해 복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 즉,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그 세금이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쓰이기 희망함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도 회귀계수가 음수이고, 오즈비가 각각 0.8815와 0.9100으로 나타나므로 독립변수들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다. 연령의 분석 결과는 노년층일수록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지만, 교육수준의 분석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

반면 소득수준과 공무원 신뢰 정도는 회귀계수가 양수이고, 오즈비도 1보다 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소득수준의 분석 결과 역시 고소득층이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추가로 통제변수는 아니지만, 연도가 지남에 따라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복지정책 방향이 시간이 지나며 보편주의로 기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간적 변화는 정부에게 긍정적인 결과이다.

다음으로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는 증세의향,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공무원 신뢰 정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과 차이는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증세 의향은 독립변수 가운데 유일하게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증세 의향의 회귀계수는 0.381이고, 오즈비는 1.4639로 앞서 살펴본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복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앞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에서는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지만, 선별주의와 선택적 보편주의 중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되, 그들에게만 제공하기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도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과 교육 수준, 공무원 신뢰 정도는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과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의 차이는 없다. 노년층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낮다.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성향은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새롭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정치성향의 회귀계수는 음수이고, 오즈비가 1보다 작으므로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14>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보편주의		선택적 보편주의	
	β (S.E)	Exp(β)	β (S.E)	Exp(β)
수평적 공정성 인식	0.160*** (0.0281)	1.1738	-0.00541 (0.0233)	0.9946
교환의 형평성 인식	-0.376*** (0.0222)	0.6867	-0.0298 (0.0187)	0.9706
증세 의향	-0.150*** (0.0335)	0.8604	0.381*** (0.0261)	1.4639
연령	-0.126*** (0.0137)	0.8815	-0.0462*** (0.0115)	0.9548
성별	-0.00898 (0.0376)	0.9911	0.00199 (0.0314)	1.0020
교육수준	-0.0943*** (0.0179)	0.9100	-0.0372** (0.0147)	0.9635
소득수준	0.0909***	1.0952	-0.0315	0.9690

	(0.0307)		(0.0245)	
정치적 성향	-0.00426 (0.0207)	0.9957	-0.110*** (0.0172)	0.8956
공무원 신뢰 정도	0.0691*** (0.0192)	1.0716	0.0599*** (0.0160)	1.0617
연도	0.0395** (0.0157)	1.0403	0.0169 (0.0130)	1.0170
상수항	-77.56** (31.59)		-33.13 (26.29)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Type 3 Analysis of Effects를 통해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Type 3 Analysis of Effects는 3중제곱합이라고도 하며, 독립변수의 F값이 큰 순서대로 그 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에 나타난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크기는 증세 의향 > 교환의 형평성 인식 > 연령 > 정치적 성향 > 수평적 공평성 인식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공무원 신뢰 정도 > 연도 > 성별 순이다. 증세 의향의 F값이 202.5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F값이 195.92로 그 다음이므로 증세 의향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크고, 교환의 형평성 인식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외의 변수들의 F값은 두 변수의 F값과 큰 차이를 보여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표 15>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3중제곱합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F Value	Num DF	Den DF	Pr > F
수평적 공평성 인식	25.51	2	29735	<.0001
교환의 형평성 인식	195.92	2	29735	<.0001
증세 의향	202.59	2	29735	<.0001
연령	43.33	2	29735	<.0001
성별	0.06	2	29735	0.9419
교육수준	14.10	2	29735	<.0001
소득수준	10.32	2	29735	<.0001
정치적 성향	29.24	2	29735	<.0001
공무원 신뢰 정도	7.94	2	29735	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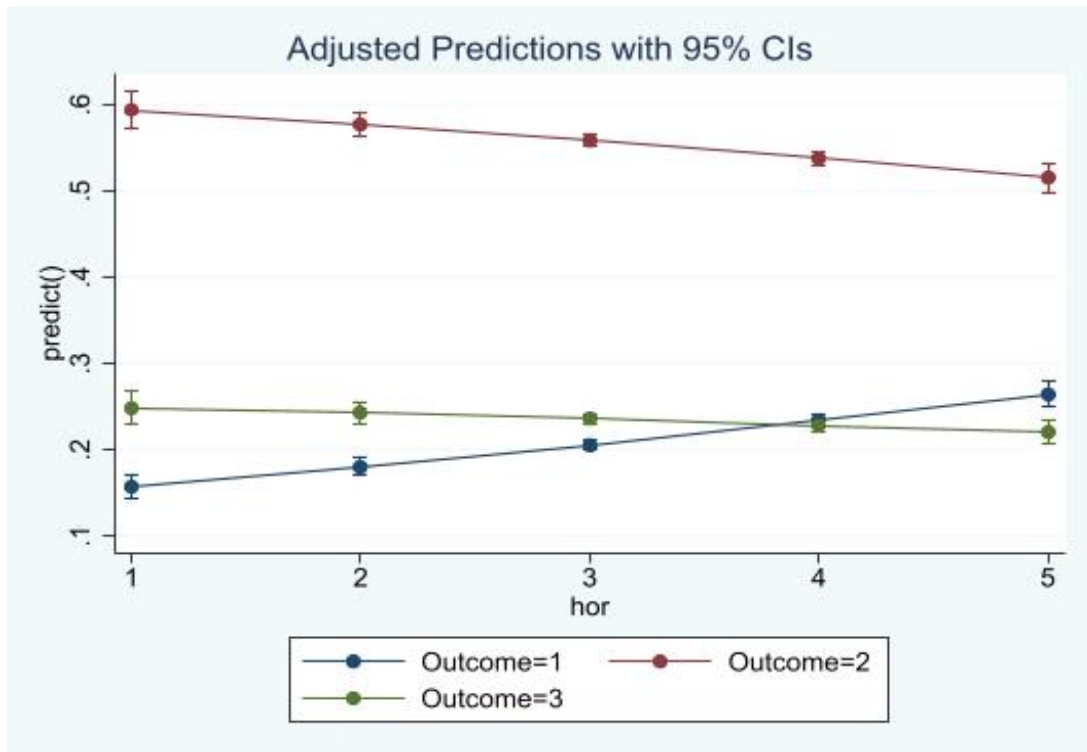
연도	3.30	2	29735	0.0370
----	------	---	-------	--------

마지막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한계효과를 통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결과를 오즈비를 통해 해석하였지만,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한계효과 개념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해석하기도 한다(고길곤, 2018).

한계효과는 독립변수가 변할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변화 크기를 의미한다. 한계효과의 계산은 독립변수가 아주 작은 값만큼 변화했을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연속형 변화를 이용한 접근방법과 독립변수가 일정한 크기로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이산형 변화를 이용한 접근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이산형 변화를 이용한 접근방법으로 회귀계수를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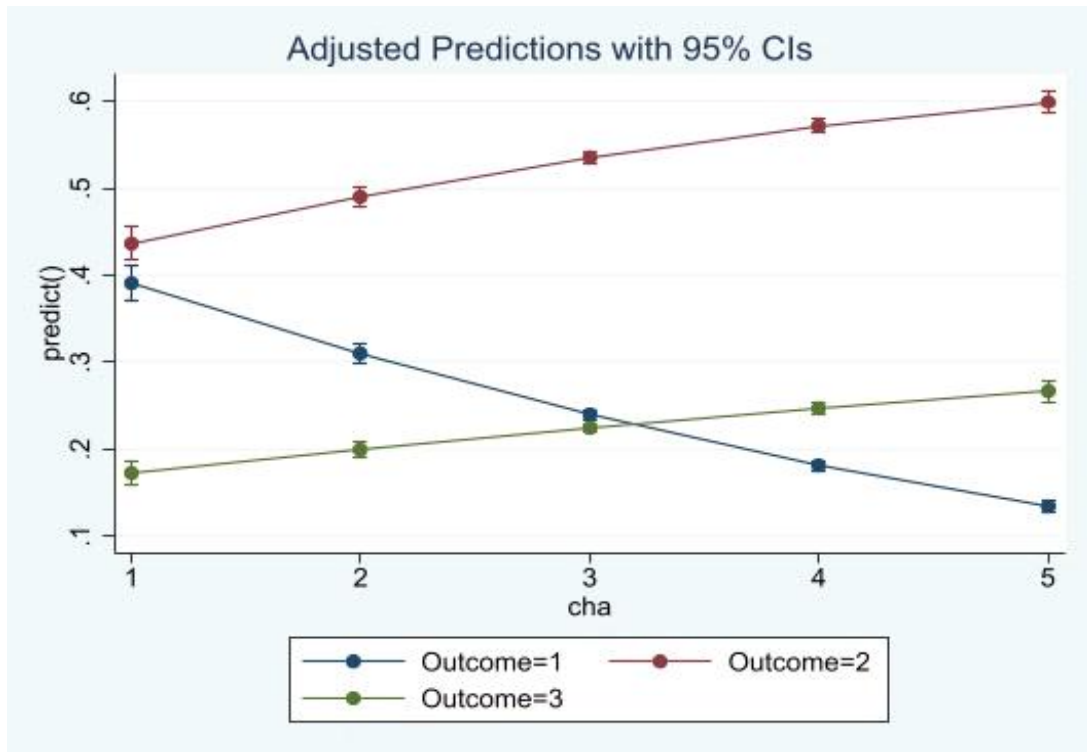
먼저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확률을 살펴보자, 수평적 공평성 인식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느끼는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응답값이 커질수록 상대적인 세금 부담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하여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진다. 다음의 <그림 4>는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이다. 이를 해석하면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해 조세 불공정 인식이 커질수록 보편주의(Outcome=1)를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고, 선택적 보편주의(Outcome=2)와 선별주의(Outcome=3)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한 단위 증가에 따라 각 종속변수를 선택할 확률의 변화 정도인 기울기가 크지 않다. 가장 기울기가 낮은 선별주의를 선택할 확률은 0.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그나마 기울기가 가파른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도 약 1.5만큼 증가하는 데에 그친다. 즉, 독립변수인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변화하더라도 종속변수인 복지정책 선호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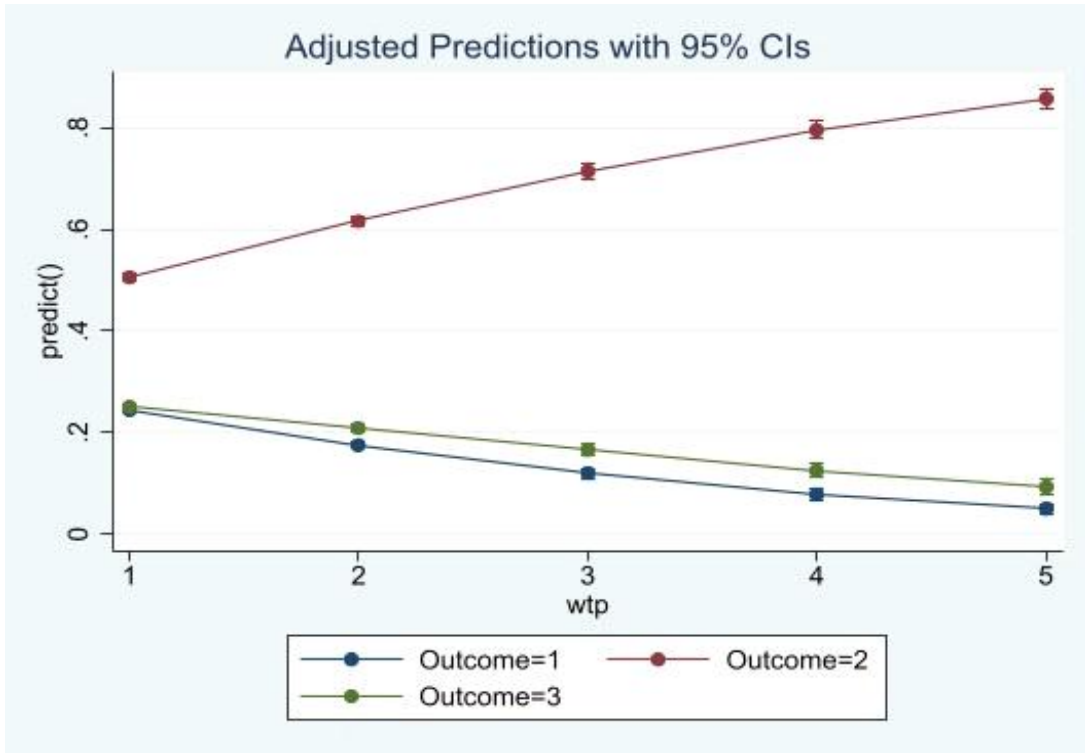
조세 불공정 인식을 측정한 다른 독립변수인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5>).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납부한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의 비교한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고, 응답값이 커질수록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낮아진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은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과 그래프의 방향, 기울기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즉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Outcome=1)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선택적 보편주의(Outcome=2)와 선별주의(Outcome=3)를 선택할 확률은 증가한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은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보다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 독립변수의 값(교환적 형평성 인식)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증세 의향의 한계효과 그림은 <그림 6>과 같다. 증세 의향은 응답자가 현재 세금 수준의 몇 퍼센트까지 증세를 부담하겠다고 선택하는지를 통해 측정되어, 독립변수 한 단위가 커지는 것은 응답자가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계효과 그림을 통해 증세 의향이 높을수록 보편주의(Outcome=1)와 선별주의(Outcome=3)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선택적 보편주의(Outcome=2)를 선택할 확률은 증가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선택적 보편주의(Outcome=2)의 가파른 기울기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선택적 보편주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0.8을 초과하며 매우 높아진다.

<그림 6>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증세 의향의 한계효과 그림



2.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결과를 나타낸 <표 16>을 통해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과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점에 있다.

앞선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과 같이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 먼저 해석해보자.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독립변수 중 수평적 공평성 인식, 교환의 형평성 인식, 증세 의향과 통제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공무원 신뢰 정도, 연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수평적 공평성 인식, 교환의 형평성 인식, 증세 의향은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와 같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회귀계

수만 양수이고, 교환의 형평성 인식과 증세 의향의 회귀계수가 음수이다. 오즈비 역시 수평적 공평성 인식만 1보다 크고, 나머지 두 변수는 1보다 작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고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낮다.

통제변수에서 유의미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공무원 신뢰 정도, 연도가 모두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에서 얻은 결과와 방향이 같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 이와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교환의 형평성 인식, 증세 의향,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공무원 신뢰 정도이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새롭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새롭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회귀계수가 음수이고 오즈비는 1보다 작으므로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의 결과 해석에 차이는 없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낮다고 인식할수록(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

추가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할지의 의향에 따라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과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도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과 일치한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은 낮지만,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은 높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통제변수들 또한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방향이 모두 같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고,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표 16>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보편주의		선택적 보편주의	
	β (S.E)	Exp(β)	β (S.E)	Exp(β)
수평적 공평성 인식	0.171*** (0.0305)	1.1861	0.00536 (0.0262)	1.0054
교환의 형평성 인식	-0.383*** (0.0243)	0.6820	-0.0368* (0.0212)	0.9639
증세 의향	-0.133*** (0.0360)	0.8755	0.398*** (0.0292)	1.4883
연령	-0.133*** (0.0159)	0.8750	-0.0532*** (0.0140)	0.9482
성별	-0.00110 (0.0440)	0.9989	0.0108 (0.0388)	1.0108
교육수준	-0.0962*** (0.0208)	0.9083	-0.0386** (0.0181)	0.9621
소득수준	0.0932*** (0.0345)	1.0977	-0.0290 (0.0291)	0.9714
정치적 성향	-0.00264 (0.0226)	0.9974	-0.109*** (0.0194)	0.8970
공무원 신뢰 정도	0.0724*** (0.0210)	1.0751	0.0637*** (0.0181)	1.0658
연도	0.0425*** (0.0164)	1.0434	0.0201 (0.0139)	1.0203
상수항	-83.49** (33.05)		-39.31 (28.02)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Type 3 Analysis of Effects를 통해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표 17>은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크기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크기는 증세 의향 > 교환의 형평성 인식 > 연령 > 정치적 성향 > 수평적 공평성 인식 > 교육수준 > 공무원 신뢰 정도 > 소득수준 > 연도 > 성별의 순서로 나타났다.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에서 나타난 변수의 상대적 중요

성과 공무원 신뢰 정도와 소득수준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도 역시 증세 의향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만이 큰 F 값을 보이며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표 17>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3종제곱합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F Value	Num DF	Den DF	Pr > F
수평적 공평성 인식	17.23	2	11635	<.0001
교환의 형평성 인식	131.19	2	11635	<.0001
증세 의향	133.08	2	11635	<.0001
연령	31.87	2	11635	<.0001
성별	0.32	2	11635	0.7239
교육수준	10.80	2	11635	<.0001
소득수준	5.63	2	11635	0.0036
정치적 성향	18.49	2	11635	<.0001
공무원 신뢰 정도	9.97	2	11635	<.0001
연도	1.09	2	11635	0.3378

3.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은 동일인의 전-후 비교를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의 영향을 제거하여 오차를 줄이고, 종속변수의 주요 변동 원인으로 추정되는 독립변수를 고정요인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인 수평적 공평성 인식, 교환의 형평성 인식, 증세 의향의 세 가지 변수의 결과만을 <표 18>로 제시하였다.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과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과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증세 의향은 반대로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교

환의 공평성 인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은 양수인 회귀계수와 1보다 큰 오즈비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음수인 회귀계수와 1보다 작은 오즈비를 가지므로 앞선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과 확률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해석이 적용된다.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는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증세 의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증세 의향 모두 회귀계수가 양수이고 오즈비가 1보다 크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표 18>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변수	보편주의		선택적 보편주의	
	β (S.E)	Exp(β)	β (S.E)	Exp(β)
수평적 공평성 인식	0.114*** (0.0413)	1.1203	0.0757** (0.0331)	1.0787
교환의 형평성 인식	-0.290*** (0.0351)	0.7485	-0.0389 (0.0281)	0.9619
증세 의향	-0.0596 (0.0484)	0.9421	0.286*** (0.0373)	1.3313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Type 3 Analysis of Effects를 통해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표 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은 증세 의향 > 교환의 형평성 인식 >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순서이다.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에서도 역시 증세

의향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큰 F값을 보이며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9>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3종제곱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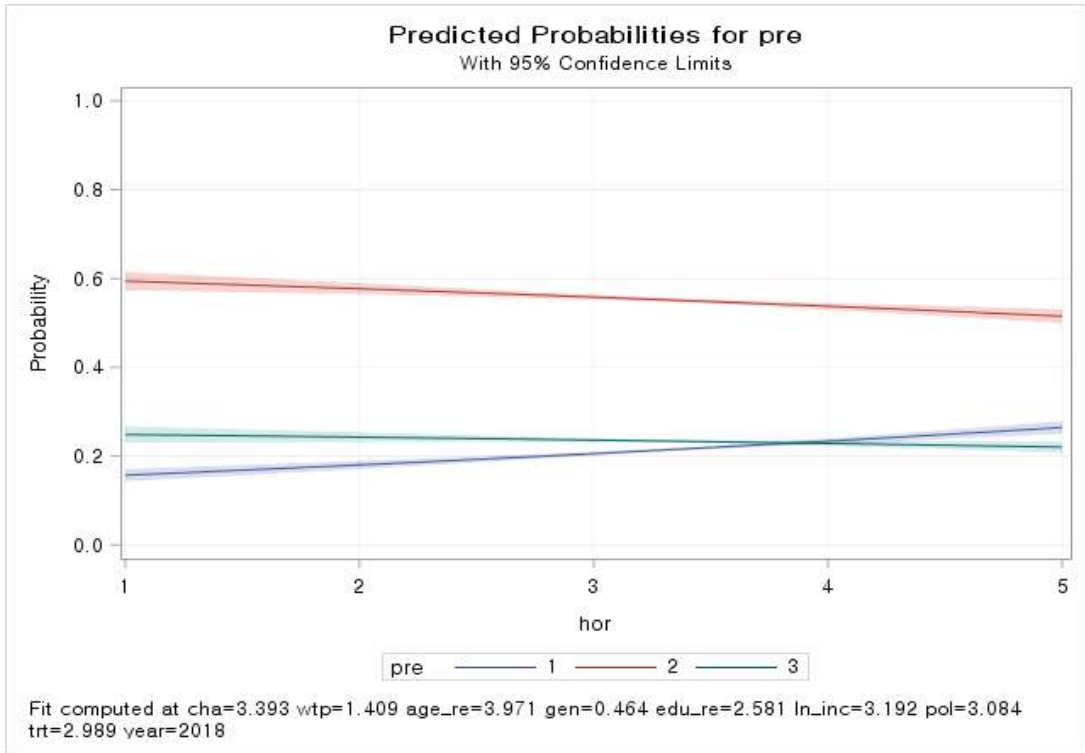
Type 3 Analysis of Effects				
Effect	F Value	Num DF	Den DF	Pr > F
수평적 공평성 인식	27.15	2	20695	<.0001
교환의 형평성 인식	208.26	2	20695	<.0001
중세 의향	217.66	2	20695	<.0001

모형 적합도와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STATA 16.0 버전에서 고정효과 모형은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각 범주의 예측이나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없다.²⁾ 따라서 추가로 SAS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다.

첫 번째로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확률은 <그림 7>과 같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응답값이 커질수록 많은 세금 부담을 느껴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다고 해석하였다.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보편주의(1)를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고, 선택적 보편주의(2)와 선별주의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한다. 그렇지만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한계효과 그림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크지 않아서,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변화하더라도 복지정책의 선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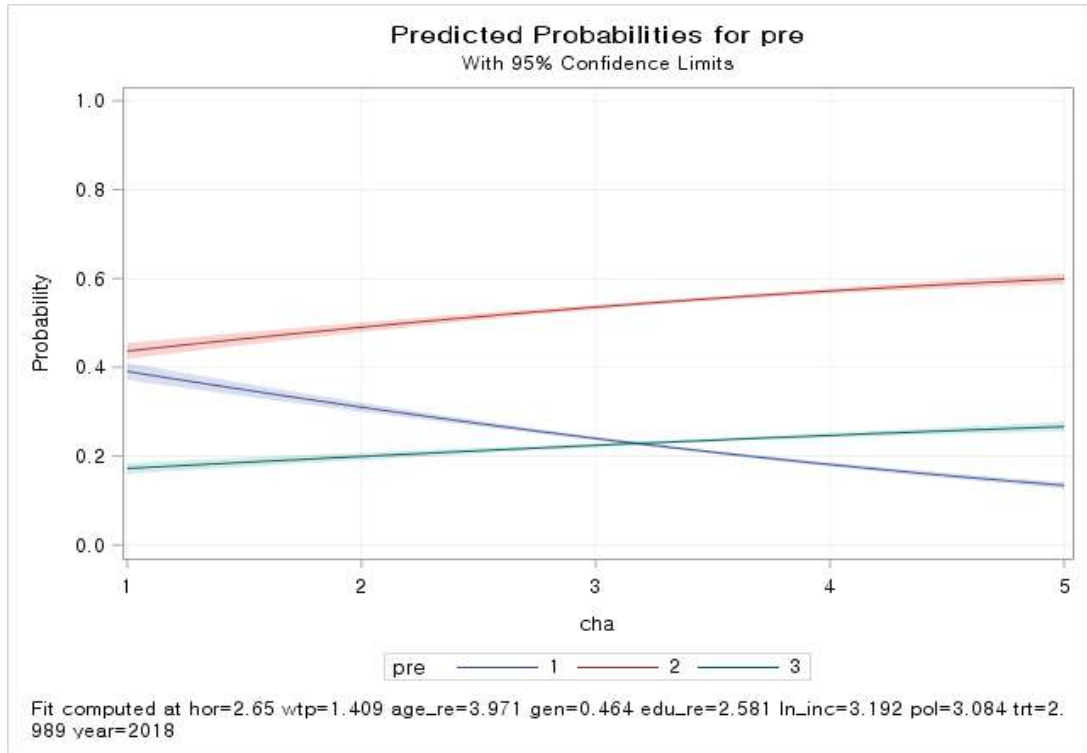
2) 민인식·최필선,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주)지필미디어, 2019, 225p

<그림 7>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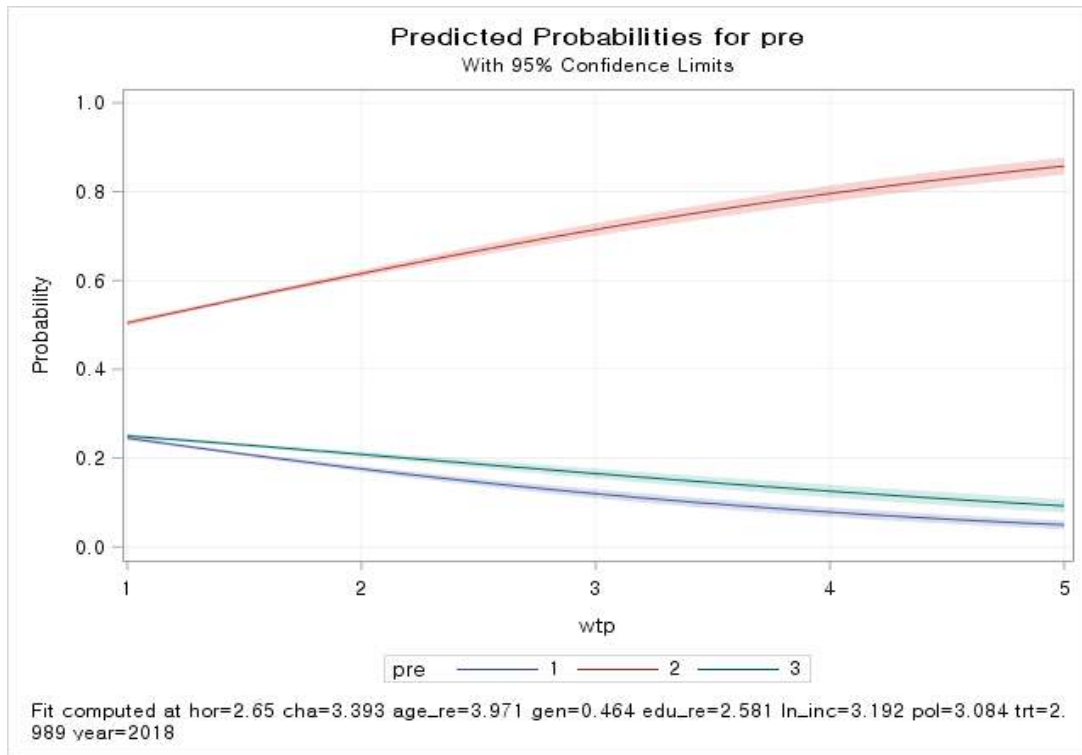
다음으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선호의 변화 확률을 알아보자.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고, 응답값이 커질수록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여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진다고 해석하였다. <그림 8>은 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으로써 앞서 살펴본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 보편주의(1)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선택적 보편주의(2)와 선별주의(3)를 선택할 확률은 증가한다. 다만,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한계효과보다 조금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 3종 제곱합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수평적 공평성 인식보다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교환의 형평성 인식의 한계효과 그림



증세 의향의 한계효과 그래프도 앞선 두 독립변수의 한계효과 그래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증세 의향은 응답자의 현재 세금 수준의 몇 퍼센트까지 증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통해 측정되어, 응답값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 부담 의향을 나타낸다. <그림 9>에 나타났듯이 증세 의향의 응답값이 커질수록 보편주의(1)와 선별주의(3)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선택적 보편주의(2)를 선택할 확률은 증가한다.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의 한계효과 그림과 마찬가지로 선택적 보편주의(2)는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인다. 증세 의향이 큰 사람일수록 선택적 보편주의를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으로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림 9>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증세 의향의 한계효과 그림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지향하는 복지태도에 조세 불공정 인식과 증세 의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보편주의, 선택적 보편주의, 선별주의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독립변수인 조세 불공정 인식을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증세 의향은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세급 수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다항 로짓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과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변수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었고, 선별주의 대비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평적 공평성 인식과 증세 의향이였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비교한 결과,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회귀계수는 양수이고 오즈비가 1보다 커서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음의 회귀계수와 1보다 작은 오즈비 값을 보여서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선별주의 대비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 이를 바꿔 말하면 교환의 형평성 인식

이 낮을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선별주의와 선택적 보편주의를 비교한 결과,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영향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가 0보다 크고, 오즈비는 1보다 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증세 의향도 양수의 회귀계수와 1보다 큰 오즈비 값을 보였다.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효과 개념을 통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지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과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반대로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아질수록(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작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과 선별주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증세 의향이 높을수록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지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Type 3 Analysis of Effects를 통해 종속변수인 복지정책 방향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독립변수는 증세 의향 > 교환의 형평성 인식 > 수평적 공평성 인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설정한 연구가설 중 <가설 1-1>, <가설 1-2>, <가설 2-1>, <가설 3-2>를 채택할 수 있었고, 나머지 두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0>).

<표 20>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설 채택 여부

구분	내용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1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수평적 공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채택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가설 2-1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채택
가설 2-2	교환의 형평성 인식이 낮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기각
가설 3-1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기각
가설 3-2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이 높을수록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복지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인 세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복지 확대는 찬성하고 증세는 반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복지태도와 낮은 조세 공정성 인식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러한 조세 인식에 중점을 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조세 불공정 인식과 증세 의향을 독립변수로 하고,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얻었다.

먼저 한국의 낮은 조세 공정성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하여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7.08%,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5.02%로 나타나 7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내 조세제도의 수평적 공정성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환의 형평성 인식은 수평적 공정성 인식보다 나은 수준이었으나 이 역시 불공정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42.18%)이 공정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11.44%)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을 물었을 때 응답자 중 64.48%가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세금의 5%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5%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조사표본의 조세 불공정 인식은 높고,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는 결과는 조세 회피적 태도가 악화하기 전에 정부의 조세 인식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보편주의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부족하다. 그러나 선별주의보다 선택적 보편주의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식이 보편주의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을 구상할 때 정책의 목적, 적용 대상 등 정책 자체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복지정책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고안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복지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다. 증세를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선택적 보편주의를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를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더라도 우선은 선택적 보편주의 형태의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복지비용 확보에 유리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조세 불공정 인식과 증세 의향이 복지정책 방향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조세 불공정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우선 선택적 보편주의 노선을 취하며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독립변수 구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조세 불공정 인식을 분배적 공정성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분배적 공정성의 구성요소 가운데 수직적 공평성 인식은 포함하지 못했다. 수직적 공평성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에 차이가 있어야 공평함을 의미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누진적 조세제도의 근거가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조사표에서 수직적 공평성 인식을 묻는 문항을 찾을 수 없어 분배적 공정성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조세 불공정 인식을 측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세 불공정 인식을 해석하는 방식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수평적 공평성에서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고, 세금 부담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조세 불공정 인식이 낮게 해석하였다. 교환의 형평성 역시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할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세 불공정 인식이 높고, 혜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세 불공정 인식이 낮다고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교환의 형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정의를 고려하면, 납부한 세금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과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가장 공정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을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남는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여기서 나아가 기존의 많은 연구가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서도 세금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확

인하여 두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증세를 부담할 의향을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세 의향과 복지태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없지만, 조세 불공정 인식 가운데 수평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는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재정패널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문항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절히 해결해야만 두 조사를 통한 조세 불공정 인식과 복지태도의 관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16pt)

- 강병구. (2014).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로 실현하는 복지국가. 노동사회, Vol.179, 22-33.
- 강민조. (2017).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309-331.
- 강육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 인식, 제42권 제3호, 41-72.
- 고길곤. (2018). 『범주형 자료 분석』. 문우사
-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 대한민국 재정.
- 금종예·금현섭. (2017).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1권 제1호. 1-29.
-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 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1호. 27-57.
- 김상돈·박지영. (2018).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매개효과분석.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2호, 5-35.
- 김성보. (2011). 조세 공공성의 실현 없이 복지의 미래는 없다. 역사비평, 2011.2, 2-11.
- 김수완·김상진·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67-90.
- 김수정.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여성학연구, 제25권 제1호, 63-91.
- 김연명. (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통권 19호), 15-41.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11.9, 211-240.

- 김재휘·강윤희. (2013). 조세 회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제27권 제3호, 135-153.
- 김형관·이상록. (2019).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태도 결정과 거시경제상황-개인 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331-362.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79-101.
- 민인식·최필선. (2019).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주)지필미디어.
- 박선경·이내영. (2018).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3호. 5-32.
- 박한순. (2009). Suits지수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 공평성 분석. 회계와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71-101.
- 배수진·심태섭. (2020). 조세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5권 제5호, 285-321.
- 백승주·금현섭. (2012). 소득불평등과 복지정책선호,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411-440.
- 서대석·서영희. (2002).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 미국군인 및 군무원을 중심으로. 영상저널, 10, 95-116.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4호. 5-34.
- 양종민. (2020).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68), 2020.8, 79-112.
- 유정호·조민효. (2016). 한국 청년세대의 신뢰갈등과 복지의식 유형에 관한 연구-잠재집단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171-207.
-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보편주의 복지정책을

- 위한 시론.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2호, 57-79.
- 이선정·김정석. (2017). 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 인식의 차등적 효과: 30~55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1권 제3호, 117-137.
- 이승주·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2호. 153-173.
- 이아름·김사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264.
- 이준우·정지웅·신현석·이현아. (2014).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지제도 설계와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63-81.
- 이충환. (2015). 빈곤 원인 인식과 불평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3호. 375-401.
- 이태수. (2016). 한국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논쟁과 대응 전략. 비판사회정책(52), 2016.8, 330-364.
-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254-286.
- 이현우·박시남. (2016).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 이익을 넘어서. 오토피아, 제31권 제1호, 267-298.
- 전희정·서동희.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복지 선호와 증세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12권 제2호. 33-62.
- 정도효·김창진·배수호. (2019). 조세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43-72.
- 조진만. (2019).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는가? 분쟁해결연구, 제17권 제3호, 65-87.
- 지규원·배귀희·유병욱. (2017).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을 이용한

-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선호유형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책 연구, 제31권 제4호, 59-85.
- 허수연·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203-235.
- Ann-Sofie Isaksson; Annika Lindskog. (2009).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A country comparison of fairness judge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2, 884-902.
- Emma M. Iglesia; J. Atilano Pena Lopez; Jose Manuel Sanchez Santos. (2013). Evolution over time of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nd the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pplied Economics*, 45:30, 4260-4274.
- Katerina Linos; Martin West. (2003). Self-Interest, Social Beliefs,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Re-Addressing the Issue of Cross-National Vari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19(4), 393-409.
- Korpi, W.;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5), 661-687.
- Michael L. Roberts; Peggy A. Hite. (1994). Progressive Taxation, Fairness , and Compliance. *Law&Policy*, Vol.16(1), 27-48.
- Mkandawire P. Thandika. (2005). Targeting and universalism in poverty reduction.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Stefan Thewissen; David Rueda. (2019). Automation and the Welfare State: Technological Change as a Determinant of Redistribution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52(2), 171-208.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 Titmuss, R. M. (1968). *Commitment to Welfare*. London: Allen & Unwin.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 -Focusing on Tax Awareness-

NA YOUNGSUN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paid due to Corona19 has been controversial, and there have been constant debates on universal and selective welfare preciously including Seoul city's free school meal debate in 2010 and youth allowance debate in 2015. Korea is moving toward a universal welfare state, but tax increase is a topic that cannot be ignored from the universal welfare state debate because the range of welfare policies cannot be expanded recklessly within limited resources.

Korea's social welfare spending is steadily rising every year, and it has the highest annual average growth rate compared to other sectors. On the other hand, Korea's tax burden rate recorded 20 percent, lower than the OECD average, and several prior studies

pointed out the need to improve the tax burden rate for universal welfare state. However, many prior studies have shown Koreans' duplicity in favor of expanding welfare policy but avoiding tax burdens. Nevertheless, existing studies on welfare attitude determinants often did not consider tax awareness.

In response, the study set "Does tax awareness affect the determination of welfare attitude in favor of universalism or selectivism?" as a research question. The tax awareness was largely divided into tax unfairness awareness and tax increase acceptance, and tax unfairness awareness was again divided into horizontal equity awareness and exchange equity awareness. To this end, the four-year raw data of the financial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re analyzed through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

According to the analysis, individuals with low horizontal equity awareness (high tax unfairness awareness) who thought they were paying a lot of taxes compared to taxpayers at a similar economic level were more likely to prefer universalism than selectivism and selective universalism than selectivism. In addition, individuals with low awareness of exchange equity (high tax unfairness awareness), who thought they received lower level of benefits from government compared to taxes paid, were more likely to prefer selectivism than universalism. Finally, individuals who are willingly to pay more taxes to expand welfare were more likely to prefer selective universalism than those who are not.

This study revealed that both horizontal equity awareness and exchange equity awareness of the Korean tax system are low, and confirmed that tax unfairness awareness is very high. Governmental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ax unfairness awareness before

tax avoidance increase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when the government moves toward a universal welfare state, it should phase out welfare policies in the form of selective universalism before universalism. Welfare policies are difficult to satisfy both sides, a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people who pay the cost and those who receive the benefits do not match. However, sinc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stable welfare costs to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the preference of those who are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es to expand welfare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refore, it is advantageous to secure welfare costs by implementing welfare policies in the form of selective universalism first.

keywords : welfare attitude, recognition of tax unfairness, universalism, selectivism, tax increase

Student Number : 2019-22021